

탈냉전기 중국의 다자외교전개와 동북아평화구상: 6자회담을 중심으로*

이정남**

- I. 서론
- II.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과 다자주의
- III. 탈냉전기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다자주의
- IV. 동북아지역 다자적 평화구상의 실제: 6자회담을 중심으로
- V. 결론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자주의정책이 점하고 있는 위상과 그 성격을 밝혀주고,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평화구상에서 다자간 평화구상이 점하고 있는 위상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과 동북아정책에서 다자주의외교가 점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을 통해서, 중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평화구상에서 중미관계를 주축으로 한 쌍무적관계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간외교는 단지 보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쌍무적인 관계를 외교관계의 기본으로 강조해 온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함께 다자주의외교를 중국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주의외교는 양자간 대화와 협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관계를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을 위한 핵심변수로 간주하고, 다만 보조적으로 동북아지역에 다자간평화기제가 형성된다면,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KRF-2002-005-B00021)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미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장이라는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은 6자회담을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안보 협력기제로 발전시켜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국의 태도 및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동북아지역의 다자간안보기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6자회담은 동북아의 다자간안보협력기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양자주의외교에 기초한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구상이라는 원칙 위에서 하나의 보조축으로 작용하는 한계를 지닐 것이다.

주제어 : 탈냉전기 중국의 동북아평화구상, 다자주의, 양자주의, 6자회담

1. 서론

개혁개방 이전 마오쩌둥(毛澤東)은 계급투쟁중심적인 대외인식에 근거하여 국제정세에 대한 제로섬적인 인식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개혁개방에 유리한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국제정세인식에서 전쟁가능성의 감소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1980년대 이후 “평화와 발전은 현 세계의 중요 주제다”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말로 표현되어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서 1990년대 이후 중국외교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다자주의외교에 대한 강조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면서, 쌍무적인 관계를 외교관계의 기본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국제기구나 다자안보협의체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외교에서 다자주의외교가 강조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내 정치학자들이나 서방의 중국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자주의외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자주의외교에 대한 중국내의 연구동향은 다자주의에 대한 개념적인 소개, 중국외교에서 다자주의가 지니고 있는 의미, 그리고 동아시아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나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의 지역다자간기제의 성격과 그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錢文榮 2001; 孟祥青 2001; 秦亞青 2001; 沈驥如 2001; 金鑫 2001; 楚樹龍 2001; 王逸舟 2001; 龐中英 2001; 김애경 2003; 梁云祥·趙天 2001; 王金存 2001; 주재우 2001). 다른 한편 서방의 연구들은 국제레짐에 대한 중국의 태도, 국제레짐에의 참여가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주로 다자주의외교가 중국외교에서 지닌 일반적인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Christensen 1996; Economy 2001; Kim 1995; Wang 2000). 상술한 연구들은 탈냉전기 중국에서 다자주의외교가 주요한 외교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배경과 다자주의외교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그 한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논의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다자간평화구상을 관련시켜 중국의 동북아정책에 있어서 다자주의적인 평화구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동북아지역의 지역적 특수성, 즉 정치, 경제적 이질성과 발전수준의 차이, 갈등과 적대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하여 다자간안보협력기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까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평화구상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은 주로 여타지역과 달리 왜 이 지역에서 다자간안보협력기제가 부재한가에 대해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다(金熙德 2000; 金熙德 2001; 志軍 2001).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국가핵심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6자회담을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안보협력기제가 형성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동북아정책에서 다자간평화구상이 지닌 의미와 한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개혁개방기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자주의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평화구상에서 다자간 평화구상이 점하고 있는 위상과 그 한계를 살펴 볼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개혁개방기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자주의정책이 점하고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동북아지역의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혀줌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평화구상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그 한계들을 밝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우선,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과 동북아정책에서 다자주의외교가 점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을 통해서, 중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평화구상에서 다자주의적인 평화구상이 점하고 있는 위상과 그 한계를 살펴 볼 것이다.

II.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과 다자주의

1. 개혁개방정책과 대외정책의 전환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이전 중국외교는 ‘전쟁불가피론’ ‘전쟁과 혁명’ 등에 근거한 소련일변도의 외교정책과, 세계3분론에 근거한 ‘제3세계외교’로 특징지어져 왔다(서진영 1997).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개혁개방에 유리한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동시에 점차 국제정세에서의 전쟁가능성의 감소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鄧小平文選』 第3卷, 50; 106). 이는 1980년대 중반 “평화와 발전은 현 시대의 양대 주제이다”(『鄧小平文選』 第3卷, 96)라는 덩샤오핑의 말로 요약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던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사라지고,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경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물론 지난 20여 년 간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면서,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내의 일부 현실주의 강경파들은 중국이 국력의 부상에 걸맞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강대국간의 힘의 역관계의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張睿壯 1999, 54-67; 張睿壯 2001, 20-30). 또한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고립감과 분노라는 심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강대국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강대국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葉自成 2000, 5-10).

그러나 개혁정책의 실시 이후 중국정부는 줄곧 패권주의의 반대와 세력균형을 통한 다극화의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발전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위하여 안정된 주변환경의 확보가 최대의 과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이라는 실용주의적인 이익을 위하여 미, 일 등 강대국들과 타협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특히 장쩌민

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지도자들은 덩샤오핑의 소극적 피동적인 전략적인 태도(韜光養晦)¹⁾에 기초하여 중국은 미국의 거대한 우세 앞에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일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절대로 대항하지 말아야 하고, 중단기적인 시기에 미국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견제하려는 시도는 대외정책에서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時殷弘 2003, 35)

이 같은 흐름은 2002년 16차당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부로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지도체제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후진타오지도체제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의 확보와 저비용의 안정적인 대외관계의 유지를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박두복 외 2003, 2). 특히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보고에서 주룽지(朱容基)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미국과의 안정적관계의 유지발전문제를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보고에서 국제테러리즘에 반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저비용의 안정적관계로 유지 관리하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특히 보고에서 그는 지금까지 중국외교정책에서 강조되어왔던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가야할 중요한 외교전략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다극화전략의 추진이 미국의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킴으로써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구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人民日報』 2003/3/6).

이점은 중국이 현재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과 서구중심의 질서의 변경이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서구중심의 국제질서의 혁명적인 변혁을 요구했던 이데올로기적 정책은

1) '韜光'은 자신의 명성이나 자질, 능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고, '養晦'는 은거하면서 시간과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보다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대응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서방중심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진영 2003a, 173-176).

상술한 실용주의적 현실주의경향은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안보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각은 이른바 방어적 현실주의로 공격적인 현실주의와 구분된다.²⁾ 즉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중국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미국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화와 발전의 이념은 안보를 일차적으로 중요시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보고 있다(張睿壯 1999, 54-67; 張睿壯 2001, 20-30). 이에 반해 방어적 현실주의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주동적으로 중국의 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타협과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장기적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소극적 피동적정책(韜光養晦)을 추구하면서 군사력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말아야 하며, 다만 충분한 정도의 위협능력은 반드시 갖

2)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말을 1991년 Jack Snyder가 처음 사용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Jack Snyder 1991, 11-12). Jack Snyder는 구조적현실주의를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로 나누고 있는 데, 이 두 시각은 무정부상태하에서 안전이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라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기본가정을 인정하면서도, 무정부상태의 성질, 국가의 이에 대한 반응 및 국가가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시각은 국제체계의 성격을 흡스적인 무정부상태로 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격렬한 투쟁이 국가로 하여금 공격적 전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종종 충돌과 전쟁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이에 반해 방어적 현실주의시각은 국제체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으로, 국가는 이성적 행위자로서 팽창정책에 따른 손익계산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정부상태는 반드시 격렬한 충돌과 전쟁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며, 국가로 하여금 온화하고 신중하고 절제있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于鐵軍 2000a, 31-32).

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唐世平 2001, 29-37; 唐世平 2000, 42-49; 孟祥青 2002, 10-15). 바로 이런 점에 기초해 볼 때, 방어적 현실주의적 관점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인 관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어적 현실주의적 시각은 현재 중국의 안보정책에서 주된 시각으로 안보정책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 다자주의외교와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

탈냉전기 중국외교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다자주의외교에³⁾ 대한 강조이다. 다자주의외교는 탈냉전과 함께 중국외교의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방어적 현실주의와 함께 중국의 대외정책의 전략적 사고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의 다자주의외교는 기본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의 산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의 실현이라는 전략적인 목표는 중국을 폐쇄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중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孟祥青 2001, 25). 특히 덩샤오핑의 “현재의 세계는 개방적 세계이다”(『鄧小平文選』 第3卷, 64),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분리되어서 이루어질 수 없다”(『鄧小平文選』 第3卷, 78)라는 언급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한 이념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일조하면서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향을 미쳤다.

3) 다자주의의 개념에 대하여 대개 두 가지의 시각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나는 Robert Keohane의 정의로, ‘셋 혹은 셋 이상의 국가들간에 일련의 제도를 통해 각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일종의 실천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John G. Ruggie의 정의로 ‘셋 혹은 셋 이상의 국가들 간에 기본적 행위준칙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시각이다. 중국내의 한 연구자는 이같은 정의에 기초하여 다자주의를 전략적 다자주의와 제도적 다자주의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다자주의를 일국의 대외행위 방식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다자간제도구조가 국가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후자의 관점에서 다자주의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Keohane 1990, 731; Ruggie 1992, 566; 秦亞青 2001, 9-10).

그러나 다자주의외교는 중국에게는 생소한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중국은 탈냉전 이후에야 비로소 다자간안보협력에 대하여 더욱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도를 넓혀갔다고 볼 수 있다(孟祥靑 2001, 26). 전통적으로 중국은 다자주의외교보다 양자외교를 더 선호하여, 개혁개방이전에 중국의 다자주의외교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제레짐적인⁴⁾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다자외교는 1980년대까지 거의 공백상태였다(孟祥靑 2001, 25). 중국이 이처럼 다자주의외교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던 이유는 선진국과 강대국이 다자주의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강대국 특히 미국이 다자주의를 타국의 행위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로 삼고 있으며, 또한 다자주의정책을 통하여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정한 장애에 부닥쳤을 때, 다자주의로부터 전환해서 일방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아 왔다(錢文榮 2001, 15). 또한 냉전 후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협력체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전 세계적 다자간협력체와 지역적 다자간협력체가 병존하는 국면이 출현하였지만, 이들은 미국과 서방국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것으로, 서방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직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이고, 일방주의에 다자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함께 중국은 전통적인 외교술에서 벗어나 세계정세와 주변국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다자간협력체와 다자외교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1990년 제7기 3차 인민대표대회에서 당시 총리였던 리펑의 “주변

4) 국제레짐에 관한 정의는 크레스너(Stephen Krasner)의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가 기대하는 바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라는 정의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5) 이같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통제욕은 집중적으로 유엔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국제적 다자간기제 중의 주도권을 방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질서를 통제하는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만들려고 하며, 이는 바로 탈냉전후 다자간기제가 지닌 명확한 이중성이라는 것이다(郭雅鶴 2000a, 8-9).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발언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주재우 2002, 194).

이같이 중국이 다자간외교의 전개의 필요성과 다자간협력체에서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에서 추진하는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개방으로 인해 파생되는 내부문제가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時永明 1996, 41-47). 둘째,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다자간안보협력의 추구가 종합적인 안보와 안보협력의 관념과 실천의 구현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자간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지역적인 이익을 더욱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환경의 확보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패권주의외교를 견제하기 위하여 양자주의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외교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안보와 경제무역질서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쌍무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적인 외교통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제고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다자주의외교는 강대국외교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중국이 지역강대국으로 책임을 더욱 더 잘 이행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좋은 인상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섯째, 다자주의외교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중국과 세계가 협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자주의적인 협력에 참여하는 과정 중 기타국가의 중국위협론에 대한 우려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王公龍 2002, 19; 張蘊嶺 2002, 18-19; 王逸舟 2001, 4-8; 郭隆隆⁶ 2000, 34-35; 張蘊嶺 2001, 19).

6)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동시에 겸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다자간 군비축소를 위한 대화와 기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 8월 당시 장쩌민국가주석의 ‘중국은 지역안보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층차를 통하여 대화와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는 발언이후 다자주의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었다(孟祥青 2001, 27). 그 후 동아시아포럼(ARF)의 틀 하에서 진행된 제1트랙과 제2트랙의 다자간안보대화에 참석하였고, 1996년과 1997년에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과 국경문제에 대한 상호신뢰와 군비축소를 협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움직임은 2001년 상해협력조직(SCO)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또한 2003년 2월 5일 제10기 1차 인민대표대회의 정치보고에서 주룽지 총리는 중국이 지난 5년간의 다자간외교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제고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자간외교를 발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⁷⁾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자주의적인 참여는 대부분 전략적 다자주의적 참여에 관련된 것이었고, 주권에 대한 강조, 정책의 융통성의 강조, 다자적기제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도적다자주의적인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영토분쟁 등과 같은 안보영역에서는 다자주의적인 해결이 적절하지 않고 양자주의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Wang 2000, 79). 이는 중국의 현재의 안보환경의 두드러진 개선은 우선 양자관계의 안정과 개선으로부터 초래된 것이고, 특히 강대국간의 양자관계의 개선과 강화로부터 초래된 것이기 때

7) 지난 3월 5일 개최된 제10기 1차 인민대표대회 보고에서 주룽지(朱容基)총리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은 상하이협력조직(SCO)의 건설, ASEAN과의 협력의 강화, 유엔과 기타 국제지역조직에서의 활동 등을 통하여 다자간 외교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자간 외교활동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발전모델의 다양화를 제창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中國將始終不渝地舉行獨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
<http://www.peopledaily.com/GB/paper464/8626/808517.html>(검색일: 2003. 03. 06).

문에, 양자간 안보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양자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더욱 더 많은 다자간협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자간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안보협력은 양자간 대화와 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張蘊嶺 2001, 18).

Ⅲ. 탈냉전기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다자주의

1. 탈냉전과 중국의 동북아정책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내의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주도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과의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하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함과 아울러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이후 중국외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함께 제기된 평화와 발전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주의외교를 위한 사상적인 기초를 마련하였고,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전방위외교의 추진을 통하여 아시아의식을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 지역 다자간협력체제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1990년대 중반이래로 중국이 아시아지역주의와 강대국외교를 강조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肖歡容 2003, 46-47).

중국 내의 지역강대국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강대국간의 힘의 역관계는 더욱 더 균형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저해하지 않

는 한,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건설적인 역할과 주도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唐世平 2003, 14-18). 이들은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세계적인 경제강국, 지역적인 군사강국, 그리고 이 같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근거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강대국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唐世平 2001, 29-37; 唐世平 2000, 42-49).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지역차원에서의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대외전략의 목표는 부정하지 않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의 중점은 바로 아시아지역에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肖歡容 2003, 49).

상술한 내용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초다극체제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자국내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환경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으로서의 지향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중국내에서 일반적 시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국가로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중국내 학계의 주요한 시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후진타오지도체제의 중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방향도 이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이들 연구자들은 지역강대국론의 주장이 중국이 이 지역에서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이 지역에서 방어적 현실주의정책에 근거하여 온건하고, 자기 예측적이며,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대외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민의 생활수준제고라는 중국의 전략적인 목표에도 부합하며 중국의 국가이익과 화합을 중시하는 중국의 전략문화에도 부합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唐世平 2003, 15). 실제로 후진타오지도부는 방어적 현실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대미정책에서 더욱 더 온건하고 신중하며 낙관주의적인 태도와 실사구시적인 사고와 실천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그리고 군사역량

의 현대화를 더욱 더 가속화하여 일정한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다(時殷弘 2003).

중국의 동북아정책도 상술한 동아시아정책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에게 있어 동북아지역은⁸⁾ 동아시아지역의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역이다. 동북아지역은 세계4대 주요강대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장소로, 이들 지역에서에서의 이익관계는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강대국외교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미, 일, 러 중 등 4대 강대국간의 관계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 지역뿐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孫建社 2002, 6-7). 이 같은 시각에서 중국은 현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가장 주요한 요소로 미국과 일본이 미일동맹에 기초하여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미일동맹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지위를 공고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위협능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이탈경향을 억제한다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의 동맹자와 지지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정립을 통해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가들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군사대국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미·일의 의도에 대하여, 중국은 이것이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봉쇄를 통하여 안정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타이완문제에 미·일이 개입하여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시도이며, 미국 주도적인 동북아

8) 이 논문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지리적인 근접성보다는, 지역체제의 국제관계에 외부 강대국들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참여로 정의된 침투체제(intrusive system)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 경우 동북아지역의 주요 구성국가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다(강성학 1995, 220-221).

질서의 구축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정남 2003, 133-141).

그러나 중국은 이들 국가들과 전면적인 대결로 가기보다는 유화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다자간기제를 활용한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아정책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대외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타협과 협력을 중시하는 방어적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미·일과의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타협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확보를 통하여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2. 중국의 동북아평화구상과 다자주의

동북아지역은 미, 일, 러, 중 등 세계주요 4강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과 중국간의 갈등, 한반도문제와 타이완문제가 주요한 위험요소로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안보협력기제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적 이질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 경제체제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하며, 또한 인구나 빈부격차가 크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지역의 정치적인 관계형성이 후발적이고(가령 러시아는 18세기 후기, 그리고 미국은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형성), 중대한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지역분쟁의 다발성과 핫이슈의 세계성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다자주의적인 안보의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의 대다수 국가는 다자간안보협력에 참가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다자간안보기제가 형성되는 데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한 중국과 미국도 이 지역에서 다자간안보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평화를 구상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은 양자동맹의 악화를 우려해 다자간안보협력에 소극적 자세를 취했으나 냉전이후 동맹의 보완수단으로 다자간안보협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안보현안이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자간 안보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대우 2001, 27-41). 이에 비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체와 같은 다자간안보기구의 창설을 줄곧 지지해 왔다. 일본은 취약한 역내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다자간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억지하고 자국의 발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오고 있다. 북한도 다자간 안보협력을 빙자한 주권간섭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에는 협력안보의 체제보장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다자간안보대화에 참여하고 있다(조성렬 2003, 65-66).

그러나 이 같은 다자주의적인 기제를 통한 평화구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동북아지역은 지금까지 전 지역을 포괄할 만한 다자주의안보기제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자기방위와 양자주의기제가 동북아안보의 주요한 형식이고, 강대국간의 권력균형기제가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각종 안보우려와 잠재적 충돌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간의 신뢰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피차간의 긴장관계가 일시에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역시 그동안 이 지역에서 다자적인 방식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적었다. 비록 탈냉전과 함께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다

자주의를 중시하기 시작하였지만,⁹⁾ 다자주의기제는 미국의 양자적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지는 않았다(時永明 1996, 46). 중국 역시 지역내의 경제적 협력을 넘어선 정치, 안보문제 중심의 다자간안보대화기제의 수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비록 최근 들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다자간안보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지만, 중국은 그동안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기제가 미일의 주도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중국내에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협력기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미국 또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일동맹체제와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안보기제의 건립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은 과거 역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호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냉전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안보딜레마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다자주의기제를 건립하는 것은 각국의 안보이익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셋째, 중국의 다자적기제로의 적극적인 참여는 안보압력의 감소와 동아시아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王公龍 2002, 18-19).

1990년대 중반 이래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정치학자들의 논쟁을 종합해 보면, 우선, 지역의 안보와 지역내 각국의 공통적인 발전을 위하여 각종 안보협력기제와 협력방식이 발휘하는 역할은

9) 1996년 2월, 미국의 동아시아안보전략은 양자동맹과 군사배치를 기초로 하여, 지역다자주의기제를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사용코자하였다.

10) 중국 내의 한 학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영역에 대해 다자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일종의 이상을 잃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융통성있는 안보기제로서 다자주의는 동아시아안보영역의 발전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각국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는 일방주의나 양자주의의 이점이나 제도적 배치를 단순히 배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각 성원간의 구속력있는 기구를 당장에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역안보기제를 건립하여 제도화협력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王公龍 2002, 18-19).

이 지역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동북아지역의 정치현황과 안보현황은 유럽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럽방식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방식의 기제는 교류와 협력기제이고 주요한 형식은 대화와 협상방식이며, 주요내용은 상호간의 신뢰와 평등에 기초하여 공동의 안보를 이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자간 안보가 다자간 안보협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다자간 안보대화는 믿을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일국의 국방능력이나 양자간 안보협력과 대화가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부족하고, 특히 지역적인 안보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을 조성할 때 다자간 안보협력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金熙德 主編 2001, 36-39).

이처럼 중국내의 시각은 비록 유럽에 비교하면 그 제도화정도가 매우 느슨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만,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기제의 건립을 통한 평화의 확보의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안보와 평화의 확보는 강대국외교, 그리고 강대국간의 양자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북아지역에서 중, 미, 러, 일 등 4대 강대국관계가 이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대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의 균형을 실현해야만 마침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에서 강대국간 다자간안보기제를 통한 평화와 안정의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일동맹을 들고 있다. 즉 비록 각자의 국익으로부터 출발해서 각 강대국이 모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주장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국제적인 업무를 주도하고, 전략적인 이익을 공고화시킬 목적으로 미일안보기제를 팽창시키고, 군사동맹을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4강의 전략적인 이익균형의 심각한 붕괴

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중미, 중일, 미러, 일러관계 등이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하여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馮瑞云 2001, 50-51). 따라서 이같은 미일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기제의 확립을 통한 평화구상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상술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평화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강대국간의 세력균형과 양자주의외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봄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에서 다자적인기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동북아지역 다자적평화구상의 실제: 6자회담을 중심으로

1. 6자회담과 중국의 구상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지역은 여전히 냉전적인 산물인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파생된 국제적인 무력충돌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동북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안보기제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상호견제와 군비경쟁으로 나아가면서 신 냉전으로 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처럼 한반도문제와 동북아지역의 평화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의 총체적 안보질서가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가는 한반도정세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정세의 발전방향 역시 동북아지역 안보질서형성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주요 4강인 중, 미, 일, 러는 한반도정세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이 지역의 정세가 자국의 이익에 불리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을 원

치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이나 동북아의 안보질서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변수로 미국을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중국내의 정치학자들의 문제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한 연구자는 1990년대 중반이후 동북아안보질서의 변화추세는 미국에 의한 패권체제나 아니면 지역의 협력적 안보기제의 형성이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안보협력기제의 형성은 지역의 냉전적인 잔재와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金熙德 2000, 30). 또한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동북아에서 미일동맹과 중국의 대립구도를 다자간협력기제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이같은 다자간협력기제를 형성하는 데 그 출발점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唐世平·曹筱陽 2002, 108).

이처럼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동북아평화질서의 구축을 함께 연계시켜서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에서는 최근 동북아의 다자간안보협력기제의 형성의 출발점으로 북한핵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변 강대국들과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동북아지역의 안전보장조치로서 지역적인 안정보장대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季志業 2004; 唐世平·曹筱陽 2002; 金熙德 2000; 高村忠成 2001, 182-187).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에서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 다자간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1990년 한반도 핵문제가 돌발한 이후 중국은 원칙적인 성명발표를 제외하고는 불개입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지만, 핵문제는 북미 양국간의 문제이므로 이것이 국제화되는 데는 반대해 왔다. 아울러서 평화적인 해결, 경제제재나 군사압력 반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약속, 중국의 영향력의 한계 등을 강조해 왔다.

1차 북핵위기 발발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상호압력을 행사하며 실랑이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다자간협력기제의 건설과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연계시키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형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4자회담에 중국은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다. 1996년 4월 16일 미국과 한국이 4자회담을 제의했을 때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1996년 8월 26일 당시 외교부장이던 첸지천 부총리가 한국의 이기주차관과의 회견에서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한반도평화체제가 필요하며 이 평화체제 수립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였다(『人民日報』 1996/8/27). 그 후 1997년 3월에 4자회담 설명회가 개최된 시점부터 태도를 바꾸어 4자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人民日報』 1997/3/6), 1997년 7월 2일에 4자회담 참가에 동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또한 북한에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태환 2002, 150).¹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적 역할과 북미간의 일방적인 대화가 자칫 한반도문제의 미국 독점으로 끝나고 자신들이 둘러리도 둘러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는 점이다(조성렬 2003, 50).

그러나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방북하였을 당시 북한의 강석주 제1외무상이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북한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대두하면서 중국의 태도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초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

11) 4자회담은 1997년 3월 5일부터 세 차례의 초기회담과 세 차례의 예비회담, 그리고 여섯 차례의 본회담을 가졌지만, 남한이 남북당사자해결 원칙의 강조한 반면, 북한이 북미간의 평화협정의 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1999년 8월 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 뿐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주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후진타오체제가 등장한 이후 2003년 4월 23일 베이징 3자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 2003년 7월 7일 노무현대통령 방중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통해, 그리고 러시아, 남한, 일본등과도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2003년 8월 27일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문흥호 2003, 12-13).

이같은 중국의 입장변화가 과연 동북아지역의 다자간협력기제의 건설과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나왔는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당사자간문제의 해결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다자간협력을 통한 문제해결로 입장이 전환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이 이같은 입장전환을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의 소극적, 피동적 외교정책의 조정이다. 후진타오체제가 추구하는 외교정책은 전략적으로는 기존의 韜光養晦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有所作爲¹²⁾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와 같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긴밀히 연관되는 주변지역문제에 대해서는 有所作爲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모색해 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대미 우선적 외교정책의 추구이다. 후진타오체제의 대외정책의 방향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을 위한 주변환경의 확보와 저비용의 안정적인 대외관계의 유지가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에서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미국과의 안정적 협력관계의 유지발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북핵문제에 대하여 소극적 비협조적태도를 보여 온 기존의 정책은 중국의 대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12) ‘韜光養晦’원칙이 외교정책에 있어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有所作爲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의 한반도 전략목표이다. 중국의 한반도전략에서 최고의 전략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이 같은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권존중과 내정간섭을 원칙으로 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인 간섭이나 개입을 피해왔지만, 한반도의 핵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장의 지속적인 견지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구실이 되어 한국, 일본, 대만으로까지 핵확산이 되어 핵보유국들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중국이 국가이익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주도권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박두복 2003, 1-4; 서진영 2003b, 18-30).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북핵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핵문제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그 해결은 어렵고도 막중하여 북미양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제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 북핵문제의 신속한 평화적 해결은 안전한 주변환경 확보에 유리하며, 국가이익과도 부합된다는 인식이다. 북한의 핵역량 발전은 핵도미노현상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동북아가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량의 난민의 중국입국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셋째,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핵문제에 있어 공통된 전략적 이익과 협조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한반도 비핵화, 미사일과 핵분열물질의 핵확산방지 등의 주요 공통점에 근거하여 미국과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외교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넷째, 국제적 책임을 짐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劉金質 2003, 35-36).

결국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동북아안보환경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협조적인 중미관계의 발전, 강대국으로서의 이

미지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에서, 중국은 기존의 당사자간 해결원칙에서 전환하여 북한핵문제의 국제화와 다자간들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비록 중국이 처음부터 동북아지역의 다자간협력기제의 형성이라는 사고하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성사와 지속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자역할을 하고 있다.

2.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간평화구상의 한계

그렇다면 6자회담이 중국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구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중국은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기제로 가는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내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의 평화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해 왔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안보기제의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2003년 8월 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미국, 북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모두 참가한 제1차 6자회담은 중국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회담이 공동합의문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자간 구도안에서 양자회의를 치르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는 다자간안보협약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현안을 놓고 해법을 찾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모두 모인 최초의 다자간안보대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6자회담에서는 참가국들의 차석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실무회의의 정례화를 합의함으로써(『중앙일보』 2004/2/26), 비록 실무자차원이지만, 동북아 6개국가간의 상설화된 대화의 틀을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단계 더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중국정부가 이 회담이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형성의 출발점으로 가야 한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의 국가핵심연구기관의 연구자에 의하여 6자회담이 장래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³⁾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정부가 6자회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참가국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실무협의단 구성을 제기하여 6개국이 이에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회담 참가국에게 6자회담에 수개월의 간격이 생긴다면서 사실상 사무국에 해당하는 실무 특별그룹을 설치해 실무협의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실무협의단은 6자회담에 참가하는 차관, 국장급보다 낮은 과장급 실무자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의 정례안보대화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조성렬 2003, 55). 이 같은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의 형성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은 이미 중국정부 산하 주요연구기관에 의하여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착수된 상태이다.¹⁴⁾

그러나 동북아안보협력체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도화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내의 한 연구자는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다자들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력수단으로 활용

13)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PEACE21)와 아사히신문 아시아 네트워크(AAN),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2004년 5월 28일에 개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국제관계연구소의 지즈예(李志業) 부원장은 6자회담을 앞으로 지역안보를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협력체로 점차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린대학의 류더빈 교수는 2003년 10월 24일과 25일 사이에 The Northeast Asian Intellectuals's Solidarity Korea가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6자회담이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선지루(沈驥如) 국제전략연구실 주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기구 구상에 대하여, 이 구상은 “현재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검토에 착수한 단계이며, 아직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정부에 의하여 이 구상이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중앙일보』 2004/2/25).

하여 북한의 우선적 양보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朱鋒 2003, 12).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중, 미 모두 양자주의를 선호하고, 그리고 주요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에 근거한 양자관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동북아지역 다자간 협력기제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부시정부의 출범이후 미국은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 양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다자포럼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경향을 띄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포럼을 활용한다는 의미로서 일방적다자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하겠다(한동만 2003, 16-17). 중국 역시 비록 냉전후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안보협의체의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자간안보협의체가 미, 일의 주도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즉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안보협의를 통하여 지역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과 동북아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기제의 건설 구상과 관련시켜 사고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태도 및 미국과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은 제한된 현실주의적인 정책하에서 주요 강대국간의 타협과 협력을 통해 안정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평화를 위하여 중미관계를 가장 우선적인 초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관계를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을 위한 핵심변수로 사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또한 보조적으로 동북아지역에 다자

간평화기제가 형성된다면 미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장이라는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이 중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안보협력기제의 건립구상으로 발전될 수 있을지는 미국의 태도 및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전통적으로 중국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의심을 가지면서, 쌍무적인 관계를 외교관계의 기본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이제 국제기구나 다자안보협의체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외교에서 다자주의외교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안보정책은 방어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양자주의를 기본축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다자주의를 결합해야 한다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의 안보환경의 두드러진 개선은 우선 양자관계의 안정과 개선으로부터 초래된 것이고, 특히 강대국간의 양자관계의 개선과 강화로부터 초래된 것이므로, 다자간안보협력은 양자간 대화와 협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실현, 미국의 단극체제의 견제, 그리고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의 강화를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평화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에서 강대국간의 세력균형과 양자주의외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관계를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상을 위한 핵심변수로 사고하고 있다. 다만, 보조적으로 동북아지역에 다자간평화기제가 형성된다면 미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장이라는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6자회담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안보협력기제로 발전되어, 중국의 동북아의 평화구상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혹은 할 수 있을지는 미국의 태도 및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동북아지역의 다자간안보기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6자회담은 동북아의 다자간안보협력기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양자주의외교에 기초한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구상이라는 원칙 위에서 하나의 보조축으로 작용하는 한계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학. 1995.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 변천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 나남.
- 김애경. 2003.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와 전략적인 동인.” 현대중국학회 2003년 하반기정기학술대회자료집, 『변화하는 중국과 한·중관계의 재조명』. 11월 29일.
- 문홍호. 200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기조.” 『중소연구』 27(3).
- 박두복 외. 2003.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6월 24일.
- 서진영. 1997. 『현대중국정치론』. 나남.
- _____. 2003a.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대외정책.”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화평사.
- _____. 2003b.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문제.” 『동아시아연구』. 고려대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제7호.
- 이정남. 2003. “탈냉전기 중국의 동북아 평화구상.” 『평화연구』 11(4). 가을.
- 이대우. 2001.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구성 : 미국의 입장.” 『동북아다자안보협력과 주변4강』. 세종연구소.
- 이태환. 2002.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한중협력.” 『동북아안보와 한중협력』. 세종연구소.
- 조성렬. 2003. “동북아평화협력체 구상과 북핵 6자회담.” 『2003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회의자료집』.
- 주재우. 2002. “다자간협력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변화.” 『현대중국연구』 4(2).
- 한동만. 2003. “동북아다자안보협력 동향과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중앙일보』 2004/2/25.
- _____. 2004/2/26.
- 錢文榮. 2001. “多邊主義，多邊外交的几点理論和政策思考.”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 孟祥青. 2001. “参与多邊安全合作：既是挑戰，也是機遇.” 『世界經濟

- 与政治』第10期.
- _____. 2002. “論中国的國際角色轉換与对外安全戰略的基本定位.”『世界經濟与政治』第7期.
- 秦丕青. 2001. “多邊主義研究: 理論与方法.”『世界經濟与政治』第10期.
- 時永明. 1996. “亞太安全環境与地区多邊主義.”『國際問題研究』第1期.
- 沈驥如. 2001. “多邊外交和多極世界.”『世界經濟与政治』第10期.
- 金鑫. 2001. “關於開拓新世紀我国多邊外交工作的几点思考.”『世界經濟与政治』第10期.
- 楚樹竜. 2001. “多邊外交: 範疇, 背景及中国的应对.”『世界經濟与政治』第10期.
- 王逸舟. 2001. “中国与多邊外交.”『世界經濟与政治』第10期.
- 龐中英. 2001. “中国的亞洲戰略: 靈活的多邊主義.”『世界經濟与政治』第10期.
- 梁云祥·趙天. 2001. “東盟地区論壇的功能与作用探析.”『世界經濟与政治』第1期.
- 王金存. 2001. “具有歷史意義的跨越: 從上海五国到上海合作組織.”『世界經濟与政治』第9期.
- 志軍. 2001. “再論建立東亞地区多邊安全框架.”米慶余.『國際關係与東亞安全』. 天津人民出版社.
- 鄧小平. 1993.『鄧小平文選』(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 張睿壯. 1999. “中国应選取什麼样的外交哲学.”『戰略与管理』第1期.
- _____. 2001. “重估中国外交所处之國際環境.”『戰略与管理』第1期.
- 葉自成. 2000. “中国实行大国外交戰略勢在必行: 關於中国外交戰略的几点思考.”『世界經濟与政治』第1期.
- 時殷弘. 2003. “中国的外部困難和新領導集体面对的挑戰.”『戰略与管理』第3期.
- 于鉄軍. 2000a. “進攻性現實主義, 防禦性現實主義和新古典現實主義.”『世界經濟与政治』第5期.
- _____. 2000b. “理想安全環境与新世紀中国大戰略.”『戰略与管理』第6期.
- 王公竜. 2002. “多邊主義与東亞的安全環境.”『当代亞太』第10期.
- 張蘊嶺. 2002. “關於我国安全及亞太安全戰略的理論性思考.”
<http://www.cass.net.cn/s28yts/wordch-en/ch-lzzy1.htm> (검색일: 2002. 01. 23).

- 郭隆隆. 2000a. “中国戰略利益与國際多邊機制的關係上.”『探索与争鳴』第11期.
- . 2000b. “中国戰略利益与國際多邊機制的關係下.”『探索与争鳴』第12期.
- “中国将始終不渝地举行独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 <http://www.peopledaily.com/GB/paper464/8626/808517.html>(검색일: 2003. 03. 06).
- 肖歆容. 2003. “中国的大国責任与地区主義戰略.”『世界經濟与政治』第1期.
- 唐世平. 2001. “再論中国的大戰略.”『戰略与管理』第4期.
- . 2002. “亞太大国關係与中国安全环境.”『当代亞太』第7期.
- . 2003. “中国的崛起与地区安全.”『当代亞太』第3期.
- 唐世平·曹筱陽. 2002. “尋求中美日相互安全的基点.”『戰略与管理』第1期.
- 馮瑞云. 2001. “冷戰后的日美安保体制与東北亞地区安全.”『東北亞研究』第1期.
- 金熙德 主編. 2001. 『中国的東北亞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 2000. “東北亞兩類安全問題及其發展趨勢.”『当代亞太』第8期.
- . 2001. “東亞安全問題及其未来安全模式.”米慶余. 『國際關係与東亞安全』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朱鋒. 2003. “六方會談后的朝核危机: 問題与前景.”『現代國際關係』第9期.
- 季志業. 2004. “地区協力体制: 6者會談的未来.”『동북아안보협력과 6자회담』.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PEACE21)·아사히신문 아시아 네트워크(AAN)·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공동개최. 5월 28일.
- 劉金質. 2003. “公正合理解決朝鮮核問題推進東北亞的和平与穩定.”『동북아협력 공동체 한·중·일 심포지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협력방안』세종연구소 주관. 10월 30일.
- 高村忠成. 2001. “東北亞多国間安全保障對話框架形成的可能性.”米慶余. 『國際關係与東亞安全』. 天津人民出版社.
- 『人民日報』1996/8/27.
- . 1997/3/6.
- . 2003/3/6.
- Economy, Elizabeth. 2001.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imes on Chinese Foreign Policy-Making: Broadening Perspective and Policies. But Only to a Point.”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University Press.
- Wang, Hongying. 2000.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Weixing Hu, Gerald Chan, and Daojiong Zha, eds.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Snyder, Jack. 1991.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Ruggie, John G. 1992.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 Keohane, Robert. 1990.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45(4).
- Kim, Samuel S. 1995. "China's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Behaviour."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Oxford: Clarendon Press.
- Christensen, Thomas J. 1996. "Chinese Realpolitik." *Foreign Affairs* 75(5). Sept.-Oct.

ABSTRACT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and the Idea of Peace toward the Northeast Asi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Six-Party Talks

LEE Jung Nam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Peace Studies of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inese perspective of multilateralism in foreign policy and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fter the Cold War. China has long been skeptical about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According to the Chinese government, major issues of external security should be dealt with not by multilateral arrangements but bilateral negotiations. But since the 1990s, multilateralism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China's external security policy, whi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argued for the complementary relations between 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bilateral negotiations.

The same thing may be said of the Chinese perspective on peace in the Northeast Asia.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s bilateral relations, especially the China-U.S. relations, as essential grounds for promoting peace in the Nor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it regards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supplementary ground for promoting peace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e Chinese government, estab-

lishing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is compatible with the Chinese strategic interest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 to speak, it offers a counter mechanism against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led by the US in this region and thus constraints on America's hegemony. And it enhances mutual understanding and thus promotes stability in the region.

Recently, China put forward the necessity of transforming the six-party talks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However, what China has to consid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s the attitude of the US and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Because it might be achieved only when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between China and the US about this goal. In addition, even with the achievement of the goal, China insists that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must function as subsidiary arrangements in promoting stability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Key Words : The Idea of Peace toward Northeast Asia after the Cold War, Multilateralism, Bilateralism, The Six-Party Talks